



글로벌 자연재해 보장격차 현황과 대응 사례

이승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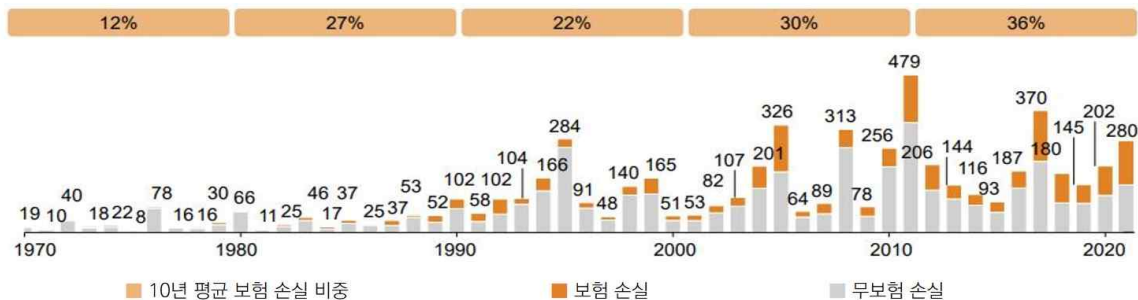
요약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보험 손실 비중이 줄고 있어, 향후 자연재해 보장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각국 정부와 보험회사는 공적 및 사적 차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공·사 협력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보장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다만 공적, 사적 대응의 효과는 다소 미미하거나 오히려 보장격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공·사 협력을 통한 위험 분담이 선행되어야 함

-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보험 손실 비중이 줄고 있어, 향후 자연재해 보장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¹⁾
-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70~2021년 연간 5%씩 증가해, 최근 10년 동안 평균 2,1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중 보험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2000년 평균 22%에서 2011~2020년 36%로 증가함

〈그림 1〉 글로벌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추이 및 보험 손실 비중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wiss Re Institute(2023), "Insured vs uninsured losses, 1970 - 2021"

- 다만, 자연재해 보장격차는 각국의 보험 침투율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가속화, 자산 가치 상승 및 도시화가 최초 및 이차 손인의 빈도 및 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자연재해 보장격차 발생 요인은 소비자의 낮은 위험 및 금융 이해도 등으로 인한 수요 측면, 불확실한 손실 추정

1) GFIA(2023), "Global protection gaps and recommendations for bridging them"

액, 고액의 보험료 산출 등으로 인한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소비자는 개인의 과거 경험에 기반하여 자연재해 위험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인식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낮은 금융 상품 이해도는 자연재해 보험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임²⁾³⁾
- 이와 더불어 대규모 자연재해의 낮은 발생 빈도로 인해 보험 손실 추정액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이는 보험회사가 자연재해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도록 유인하여 공급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각국 정부와 보험회사는 공적 및 사적 차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공·사 협력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보장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공적 대응 사례는 재정적 유인책 제공, 방재체계 신설, 사적 대응 사례는 기후변화 적응 조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이 대표적이며, 공·사 협력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보험회사가 자연재해 재보험풀을 형성한 사례가 있음

〈표 1〉 자연재해 보장격차에 대한 글로벌 대응 사례

공적 대응	사적 대응	공·사 협력 대응
• 루이지애나주(Insure Louisiana Incentive Program):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 회사에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보험 회사의 위험인수 중단 행위를 막음 • 뉴올리언스주(HSDRRS): 도시홍수 방재체계 구축을 통해 홍수 위험 지역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약 8만 5천여 건의 보험 계약이 홍수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음	• 캐나다: 홍수에 대비하여 주택에 역류 밸브를 설치한 가정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 • 미국: NFPA가 인증하는 Firewise USA 인증 지역에 거주하는 USAA 보험 가입 고객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 • 유럽: 녹화 지붕(Greening roof)을 설치한 계약자에게 재산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함	• 공·사 협력 자연재해 재보험풀 형성: ① 영국 - Flood Re: 94%의 손해보험 회사가 참여하여 홍수 고위험 거주자의 홍수보험 가입률을 제고함 ② 호주 - Cyclone Reinsurance Pool: 정부는 연간 100억 달러의 지원을 통해 보험회사의 재보험료를 줄여 사 이클론 및 홍수에 취약한 가게 및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인하함 ③ 터키 -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등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 다만 공적, 사적 대응의 효과는 다소 미미하거나 오히려 보장격차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공·사 협력을 통한 위험 분담이 선행되어야 함

- 공적 대응의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의무 도입 등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압력을 높여 보험회사가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 오히려 보장격차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음⁴⁾
- 사적 대응 사례인 적응 및 완화 조치를 통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 부보 물건마다 노출된 실질적 위험이 상이⁵⁾하여 표준화된 보험계약이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일반적으로 포함하기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 또는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공·사 협력을 통해 대규모 자연재해가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한 분담을 선행해야 함

2) EIOPA(2023), "IMPACT UNDERWRITING"

3) EIOPA(2023), "MEASURES TO ADDRESS DEMAND SIDE ASPECTS OF THE NATCAT PROTECTION GAP"

4)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잇따라 주택보험에 대한 신규 손해보험 인수 중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 위험 확대와 더불어 보험당국(CDI)의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5) 부보 물건의 공간적 특징(예: 사고 다발 지역까지의 거리), 기후 복원력 측면에서의 물리적 조건(예: 내열성 소재 사용), 적응대책의 효과(예: 경보 시스템 사용 시 관리자의 상호작용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응 조치의 적용 조건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